

충남리포트 제143호

# ChungNam Report

2014. 12. 03.

## CONTENTS

### 〈 요약 〉

1. 서해안을 둘러싼 환경 변화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3. 충남의 국제교류 현황
4.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  
비전과 아젠다 제언
5. 충남에서 주도 가능한 협력  
증진 사업 제언

##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ccw7370@hanmail.net  
김한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부이사장, dosi@dosi.or.kr  
이은주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artenu@makehope.or.kr

본 글에서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

### 요 약

-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산업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져 왔고,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통해 빠르게 서해안의 중심으로 국제화되는 지역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음
- 냉전이 해체되어가고 있고 중국경제가 부상하는 서해안시대를 맞이 하여 서해안 연안의 국제교류는 기존의 국가주도 차원에서 진일보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연계형 접근과 환황해권 지역의 다자간 이해가 결합된 글로컬(global)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역 내부에서의 다양한 분야와 기능들이 협력하여 전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시민 등 지역 내 행위자와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충남의 강점과 고유한 속성을 기반으로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 비전을 <환황해권 지역정체성의 촉진자, 글로벌 백제네트워크의 부활>로 설정하자고 제언함
- 충남도의 지방 외교 전략을 책임지는 추진체계로 가칭 <국제교류추진 전략위원회>를 도지사 산하에 두고, 그 집행단위로서 '국제교류추진단'을 두자고 제언함



## 서해안을 둘러싼 환경 변화 ◀

# 01

- 한동안 서해안은 냉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음. 냉전 시기 서해는 죽은 바다였고 장벽이었음. 그러나 이제 서해는 다시 가능성과 희망의 장소이고, 개척과 도전의 공간이 되었음.
  - 90년대 냉전의 소멸과 세계화의 진전,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은 서해를 다시 소통과 교류의 중심적인 장소로 바꾸어 놓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DJ 정부를 시작으로 서해안 개발이 시작. 초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항만과 산업단지들을 개발.
  - 이후 경제자유구역들을 지정하여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을 확대 추진.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진전과 한·중·일간의 협력적 연대기구 설치.
  - 2010년대 이후 통상 교역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북핵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 갈등이 이어짐,
  
- 이제 서해안은 다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단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
  - 기존의 국가주도 차원에서 진일보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연계형 접근이 필요.
  - 환황해 지역의 다자간 이해가 결합된 글로컬(global) 차원의 지역주의 구상이 필요.
  
- 현재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협력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음.
  - 국가 단위의 이념이나 논리에 충실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가치와 실사구시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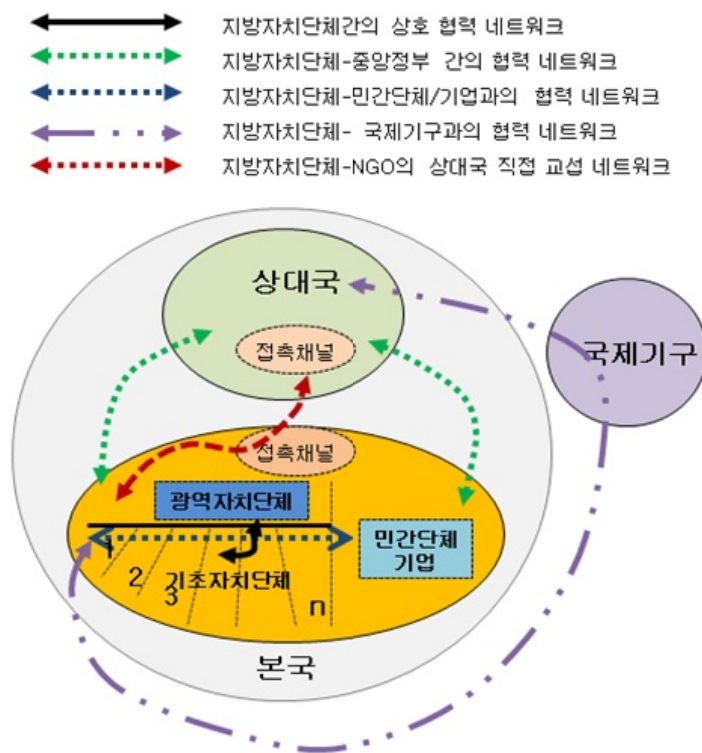
- 지방 차원의 국제교류는 개인,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 내 행위자들이 영토의 범주를 초월하여 상호작용하게 됨. 따라서 기존의 제도적인 조직, 행동양식 관계를 재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다양한 세계회의 추진과 국제교류협력들을 전개. 각 나라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매결연 우호협력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국제협력기구 설립 등으로 자체 동력을 확산하는 추세.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

# 02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 IMF 이후 위축되었다가 지방정부 자율적 우호협력이 꾸준히 증가.
  - 대 중국무역의 증대와 함께 한·중 자치체간의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이 확대됨.
  
-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국제교류 증대는 조직화된 체계를 갖춘 국제협력 체계를 수반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IULA, METROPOLIS, ICLEI 등 각종 국제적인 지방정부연합체에 가입.
  - 국내에서 주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주도의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NEAR), 대전광역시 의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강원도가 주도하는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와 같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들이 존재.
  -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통상 분야에 치중된 관계로 국제협력적 차원의 세계시민사회 기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해온 상황임.
  - 시민사회 영역에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확대는 외교전문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인 외교 접촉의 증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방 외교영역이 중요한 외교적 주체로서 부각됨.
  
-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체제하에서 수출입을 지원해 왔던 관성에 따라,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지방차원의 통상정책은 주로 지역 내 기업의 수출촉진과 외국기술 및 자본의 도입, 지역 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활동영역임.
  - 이를 세분화해 보면 수출진흥정책, 수출특화기업정책, 국제통상정보개발정책, 국제협력정책, 투자유치정책, 해외투자정책, 기술발전정책 등 분야에서 전개.
  - 경제분야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가 일본에 의해 주도되면서 해양도시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한국에서 환동해안 협력체, 대한해협 연안 협력체 등이 추진되었고, 경기도는 한·중 환황해권 협력으로서 “6+6 환황해 포럼”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 답보 상태임.
-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가 한류사업 치중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진행됨.
- 유학생 지원사업, 결혼이주민 대상 다문화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대책 등 공적 지원사업들이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실행.
  -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자체 국제교류재단이나 국제교류센터 등을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 국제협력 차원에서 부산의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강원도의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등이 국내 지자체 주도로 설립.
  - 최근 광주에서 한중일 협력사무국 활동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의회를 추진중.
- 이들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면 국제교류와 협력은 지방자치 영역 내부의 다양한 분야와 기능들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음.
- 관련된 행위자들 또한 민간단체와 기업, 국제기구 등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각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중임.
  - 보다 큰 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하에서 이들 활동들은 상호 연계 협력될 때, 한 걸음 더 진전된 교류체제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갖고, 어떠한 계획과 방법론에서 지방정부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임하는가가 중요함.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네트워크

● 충남은 각 시군별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은 역사와 환경을 보여주는 지역.

- 역사 자원, 자연·문화 자원이 다수 내재되어 있음.
- 수도권과 인접하여 산업 발전이 연계 확장되어 왔고,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는 지역임.
- 중국과 인접하여 대중국교류가 급속히 늘고 있음.

● 정치행정측면의 국제교류 현황

- 충남은 '83년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2개국 21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중
- 자매결연 6개국 6개 자치단체, 우호협력 9개국 18개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3개소 운영.
- 또한 NEAR, ICLEI 등의 자치단체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여 활동 중.

● 경제통상측면의 국제교류 현황

- 충남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71%에 육박하는 31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
-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에서도, 충남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경상북도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여줌.

● 사회문화측면의 국제교류 현황



- 충남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현재 5,231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8,874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음.(2010년도 기준, 미등록자까지 포함할 때 이주민 수는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도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수가 59.9%로 경기, 경남, 울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과 외국인 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남도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은 이제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통상 중심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충남 고유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체계들이 정비되어 포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장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전략요소들을 구상해야 함.

〈표 1〉 충청남도 국제교류를 위한 SWOT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자연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를 면한 해양관광자원 - 태안, 안면도 등</li> <li>• 생태 자연환경의 풍부 - 갯벌, 금강</li> <li>• 섬과 어촌 등 연안레저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명소로서의 관광자원 부족</li> <li>• 다양하지만 특이한 것이 부족</li> </ul>
역사 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도시 - 백제의 부여와 공주, 강경근대도시</li> <li>• 사상과 종교 자원 -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li> <li>• 저항과 자치의 역사 - 동학, 의병, 독립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것이 많은 반면 인상 깊은 것이 적음</li> <li>• 국내에서는 의미 있으나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것은 적음</li> </ul>
산업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산업에서 중화학 공업까지 골고루 분포</li> <li>• 인삼세계화, 원예박람회 등 국제적 교류 경험</li> <li>• 사회적 경제분야의 확장,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산업과 일차산업의 양극적 산업분포</li> <li>• 도시와 농촌,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li> </ul>
사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농혁신 기반 마을자치경험</li> <li>• 유학생, 이주민 인구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역량의 미약, 자생력 부족</li> </ul>

	기 회 (Opportunities)	위 험 (Threats)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개선시의 새로운 서해교역 분위기</li> <li>• 항만개발 확장에 따른 교역 인프라 증대</li> <li>• 관광자원개발과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영토갈등의 격화와 국경대립</li> <li>• 북핵 등 남북위협 확산</li> <li>• 서해안 주변 기후환경위협 증대</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교역확장과 서해에 연접한 지정학적 이점</li> <li>• 한중 FTA를 통한 새로운 통상영역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저성장과 투자유치 어려움</li> <li>• 한중 무역 통상마찰 증대</li> </ul>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확산과 긍정적 이미지</li> <li>• 도내 외국인 연계 네트워크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 한류의 험한류 우려</li> <li>• 유학생, 이주민 성장률 정체와 축소</li> </ul>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공행정벨트 연계</li> <li>• 대전 과학도시 주변 과학벨트 연계</li> <li>• 서해안 공동 교류협력 제안 (6+6 황해포럼, 서해안 공동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 완화</li> <li>• 주변 자치단체의 앞서나가는 국제 교류 개척 (경기 평택국제화, 인천 송도, 영종도, 전북 새만금, 전 남아시아문화중심도시)</li> </ul>

#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 비전과 아젠다 제언 ◀

## 04

### 1)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 비전 제언

- 21세기 충청남도가 추구해야 할 국제교류의 비전은 <환황해권 지역정체성의 촉진자, 글로벌 백제네트워크의 부활>로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비전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21세기 새롭게 도래하는 환황해권 지역정체성을 성숙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촉진자로서의 충남을 의미. 둘째, 4세기 백제의 부흥기를 21세기에 ‘글로벌 백제네트워크’로 부활시킨다는 의미. 셋째,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한 충남에서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격상된 ‘동아시아의 중심, 글로벌 충남’이라는 의미. 넷째, 아세안(ASEAN)과 동북아시아 지방도시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허브로서의 ‘글로벌 충남’을 의미.
- 충청남도가 이러한 전략개념을 공유하고 일관되게 사업과제를 집행할 수 있는 추진체제가 필요함.
- 충남도의 지방외교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개념 추진체제는 최고 의사 결정단위로서 가칭 <국제교류추진 전략위원회>를 도지사 산하에 두고, 집행단위로서 ‘국제교류추진단’을 둘 수 있음.
- 국제교류추진 전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과 민관협력의 로컬거버넌스 틀을

활용하여 충남도공무원, 민간기업, 지역대학, 유관기관, 문화단체, 풀뿌리NGO,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틀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그 산하 집행기관인 국제교류 추진단은 기획사무, 국제교류 아젠다 개발, 정치행정교류, 경제통상교류, 사회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2)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 아젠다 제언

- 21세기 충청남도가 추구해야 할 주요 핵심 국제교류 아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황해 환경 협력 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남·북한과 중국간의 황해 환경 협력 추진은 이 지역의 환경개선과 보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 진전에 기여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넘어서 정치적 측면을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에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킬 것임.
-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 내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이 바닷물과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발전소의 안전관리문제는 중국과 이해당사자인 한국정부와 충남도가 함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함.
- 충남의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교류 협력: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경제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이 모델을 세련화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방정부에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3농혁신과 분권·자치행정모델의 교류 협력: 식량과 먹거리는 안보와 주권, 생태 보전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농업의 활성화는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중요한 아젠다임. 아울러 충청남도가 발전시키고 있는 분권, 자치행정모델을 더욱 정교화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방정부에 지역혁신모델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 체계의 수립과 녹색성장기반 교류 협력: 충남도는 지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를 이용한 적정기술 난방시설의 보급을 추진할 수 있음. 그리고 이것의 성공 모델을 주변 나라 및 지방정부와 교류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와 시민교육을 활성화 위한 지원 협력: 충남도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세안국가와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규범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 설 필요가 있음.
- 충남의 글로벌 다문화정책 모델 교류협력: 충남도는 성숙한 다문화정책을 선도하여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정체성을 정착시킬 수 있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등 다문화 환경 개선조치를 선도해서 국내인과 외국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 모델을 창출하고 교류할 수 있음.
- 북한 특정 지역의 차터시티(Charter City)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창출과 연대: 충남도는 도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69개 자치단체와 함께 북한 특정 지역을 회원단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 지역을 차터시티화하기 위한 공동규범 창출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영국이 중국에 설치했던 홍콩이 차터시티에 가까운 사례임. 만약 북한의 어느 지역을 차터 시티화하기 위해 충남도가 국제규범과 기준을 창출하고 선도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이 이를 보증한다면, 지방정부가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촉진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로머(Romer) 교수는 “차터시티는 특정지역의 도시화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라고 밝힌 바 있음.  
차터시티는 일종의 경제특별구역으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이 특정 지역에 그 나라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제3국이 관리하는 자치도시임. 제3국 기관은 이 지역 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기존 체제와 다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그러면 해당 국가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

## 1) 분야별 주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예시

- 충남에서 집중하고 있는 3농혁신 기반의 마을자치 경험을 국제화하는 “마을 만들기 국제 협력네트워크” 추진.
  - 이것은 기존의 국제협력체계와는 상이한 아래로부터의 국제교류의 성격을 지님,
  - 마을을 기본단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협력하는 국제적인 연대체로서 추진 가능.
- 사회적 경제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 추진. 이는 단순 교역을 넘어서서 협력과 공생의 연대를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성격을 지님.
  -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경제 부문들이 직면하는 국가별 한계와 어려움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극복
  - 동시에 기존의 경제통상 교류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협력적 교류영역을 확장.
- 이러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국제교류 사업과 기능을 연계 하는 교류센터의 구성이 필요.
  -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과 행위자들이 통합적으로 조정·관리되고 포괄적으로 집중 연계 될 수 있는 허브 혹은 콤플렉스(Complex)의 구성.
-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들이 이러한 교류센터를 통하여 연계 발전될 수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정책들이 국내외의 유학생 취업지원 등과 연계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수출 및 국제교류 활동과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지역 단위의 주민 공동체 또는 3농혁신 기반의 농촌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결합하여 국제적인 지역사회 연대를 창출 가능케 함.
- 동시에 교류경험 및 지식 네트워크의 확장은 지식문화 아카이브로 발전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식, 사업, 행위자 네트워크들의 결합과 축적은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함.
- 공존 공생적 삶의 토대에서 세계 시민사회역량을 강화하는 미래의 공통 플랫폼(Common Platform)을 형성하여 자율적 국제협력연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세계적(Global) · 초국가지역적(Regional) · 국가적(National) · 지방적(Local) 차원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진전이 가능.

## 2)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별 국제교류 사업 예시

### ● 정치행정교류분야

구분	주요 교류유형	목 표 / 과 제
자매결연	지식학술교류	<input type="checkbox"/> 중국 연해안(허베이성, 산둥성, 저장성) -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 일본 구마모토현 · 미국 로스앤젤레스 - 북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4개 방향 바람개비 벨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지방정부인 허베이성, 산둥성, 저장성과의 교류협력의 강화</li> <li>• 아세안 지방정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하노이와의 교류협력의 강화</li> <li>• 일본 구마모토현과 태평양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교류협력의 강화</li> <li>• 북한 및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의 교류협력의 강화</li> <li>• 4개 방향 바람개비 벨트간 지방의원연맹회의, 지방고위공무원회의, 지방정당대표자회의, 미래지방의제회의 결성.</li> </ul>
국제협력	환경 · 생태 · 에너지 · 대안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그린시티 정체성의 확립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지역의 차터 시티(Charter City)화를 위한 NEAR(동북 아시아지역차터단체연합) 활성화 촉진</li> <li>• 환황해권 3농혁신과 분권 · 자치행정모델 규범 촉진</li> <li>• 환황해권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모델 교류협력 촉진</li> <li>• 환황해권 글로벌 다문화정책 모델 규범 촉진</li> <li>• '황해 환경권 레짐'(YSES Regime) 촉진</li> <li>• 환황해권 발전소 안전관리 레짐 촉진</li> <li>• 환황해권 녹색경제모델 규범 촉진</li> </ul>

구분	주요 교류유형	목 표 / 과 제
민간협력	주민자치, 시민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와 번영을 위한 NGO와의 민간협력 및 동아시아 그린파트너십(Northeast Asia Green Partnership)형성 • ‘동북아공동체 지도자아카데미’ (LANACO: Leaders Academy of Northeast Asian Community)를 설립 • ‘아세안국민회의’(APA ASEAN People’s Assembly), ‘아시아시민사회연대회의’ (SAPA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 ‘아시안브릿지’ 지원 • 충남도내 NGO 연대 활성화 및 민간협력 지원

● 경제통상교류분야

구분	주요 교류유형	목 표 / 과 제
통상진흥	제 3섹터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산업과 통상을 연결하거나 제3섹터를 활용하여 통상을 진흥하는 〈지역기반 통상진흥모델〉 개발 • 충남도 지역특성에 기반하는 농어촌 생산물 수출지원전문화 추진 • FTA 대응 지역통상협약구조 모델 제도화 • 주식회사 모델과 다른 통상진흥원모델 개발 • 수출지원기능에서 통상경쟁력 지원체제로의 전환 • 수출기업 네트워크의 지역생산기반과의 공유 확대 • 분야별, 업종별 수출정보 교류와 연계 확대 • 자매결연, 문화교류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증폭
투자유치	경제투자모델	<input type="checkbox"/> 소지역 단위 상호 공동투자모델 개발 추진 • 한중 유학생을 위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추진 • 수출지원 지식서비스 부문 공동화 추진 • 일방적 투자유치가 아닌 상호적 공동설립 방안 추진 • 기존 대학 등 해외 시설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 문화 콘텐츠 결합 지식산업 교류단지화 조성 • 융·복합 산업 유형의 공동 결합 다원화 추진 • 융·복합 과정에서 양국 경쟁력 요소의 시너지 발생 • 대학 내 벤처유형들의 상호결합
사회적 경제교류	사회적경제 통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경제 부문의 통상부문 개발 • 협동조합의 국내시장 협소한 부문 해외시장 창출 • 마을기업의 새로운 유통방식 개척 •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호혜적 공정무역 유형 창출 • 국제교류 ODA 사업 등과 결합 유형 창출 • 공동 브랜드화와 수출입업무 지원 • 금융 자금관련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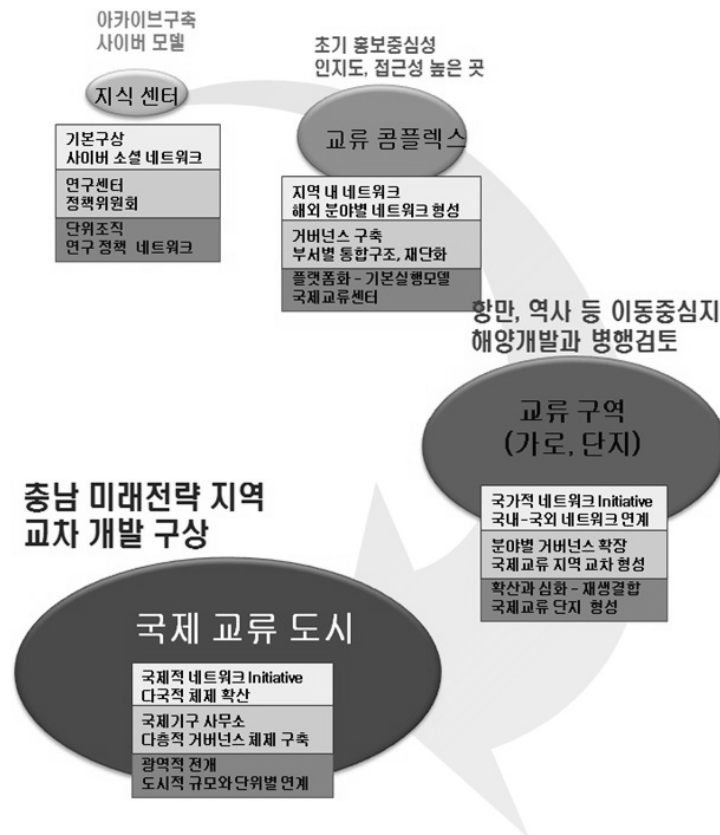


● 사회문화교류분야

구분	주요 교류유형	목 표 / 과 제
문화예술 교류	역사문화 정체성	<input type="checkbox"/>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과 아시아 예술가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도시의 현대예술 결합 축제 추진</li> <li>• 강경 등 근대도시 문화유산 네트워크 추진</li> <li>• 전통학문 현대화, 미래화 네트워크 (자민족주의 넘어서 미래 세계 시민사회의 덕목으로 교양)</li> <li>• 역사, 문화, 근대도시/ 마을 간 네트워크 추진</li> </ul>
교육학습 교류	문화교류형 관광산업	<input type="checkbox"/> 상호 호혜적 관광교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교류 사업의 지역적 전개</li> <li>• 마을단위 방문과 교류 증대</li> <li>• 신목적 관광영역의 창출</li> <li>• 서해안 교류 답사 학술 정례화</li> <li>• 다양한 복지·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진행 (평생학습, 노인복지, 환경교육 등 한중일공동사업화)</li> </ul>
다문화 세계화	국제교류 센터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콤플렉스(COMPLEX) 추진단 구성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 실천 네트워크 가입과 공동 진행</li> <li>• 국제협력 ODA의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진행</li> <li>• 각 대학 국제교류센터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li> <li>• 유학생,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연계프로그램의 지역적 결합 수행</li> <li>• 국제기구 국내연계, 상호소통과 학습 프로그램</li> <li>• 국제통상 부문과의 협력 프로그램</li> <li>• 해외 국제교류센터 네트워크 활성화</li> <li>• 문화외교적 차원의 연대체계 활성화</li> </ul>

### 3) 단계별 실현방안

- 위에서 제안한 여러 사업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2〉 국제교류의 단계적 발전방안

- 우선 첫 단계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주체의 구성과 조직 정비,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과 담론 형성이 필요
  - 지식센터 및 아카이브 센터 등의 구축을 통해 공통의 프레임을 구성.
  - 다양한 분야, 영역들과 이해집단 및 다층의 의견을 수렴.
- 두 번째 단계로는 각종 교류활동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국제교류 센터가 필요.
  - 센터를 통해 사업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집적되는 측면에서의 중심통로 역할을 수행.

## ◆ 참 고 자 료 ◆

- 네모토 마사쓰구, 2009, 지방정부 수준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자율성과 개방성에 의한 한·일 교류의 사례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재현, 2012, 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 목원대 시민사회 기초조사 연구팀, 2013, 충청남도 시민사회 기초조사 보고서,
- 박경국, 2006, “한국의 지방외교정책”, 한국학술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2014.1,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성태규, 2014, ‘충청남도 국제협력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평가와 전망 심포지움”, 한국정치학회.
- 송두범, 2013, 민선6기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정책의 과제.
- 신정호 외, 2013, 『한중관계 2.0: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 경기개발연구원 엮음, 서울:한울.
- 양기호, 2010,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서울:논형.
- 정명은, 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3호.
- 채진원, 2009, “우리 동네 아시아: ‘왜 아시아인가’ 다시 묻는다.” <월간참여사회> 12월호.
- 채진원, 2013, “지구화시대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상호인식 현황과 구성주의적 과제.” 『아시아 문화연구』 제31집, pp. 233-269.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정책효율화방안” 최종 보고서.
- 한상욱·오용준, 2013,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권의 과제와 발전방향.” 『열린충남』, 통권63호.
- Bjorkdahl Annika, 2002, From Idea to Norm: Promoting Conflict Prevention, Lund University, Lund, Sweden.
- Checkel, Jeffrey T. 2008, “Social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ARENA Working Paper No. 98/14, p. 8-11.

##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지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